

第250回國會 (定期會) **일자리創出을위한特別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4年9月23日(木)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議事日程

- 1. 현황보고
 - 가. 노사정위원회
 - 나. 국무조정실
 - 다. 재정경제부
 - 라. 노동부

審査된案件

- 1. 현황보고 1
 - 가. 노사정위원회
 - 나. 국무조정실
 - 다. 재정경제부
 - 라. 노동부

(10시14분 개의)

○**委員長 林仁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특위 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단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단병호 위원** 일자리창출특위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 사회에서 실업의 문제가 가장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업의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특위가 이런 실업자들, 서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林仁培**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홍준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준 위원**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현황보고

- 가. 노사정위원회
- 나. 국무조정실
- 다. 재정경제부
- 라. 노동부

○**委員長 林仁培** 의사일정 제1항 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4개 부처의 현황보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정부기관은 재정경제부 등 모두 11개 기관입니다마는 오늘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노동부 등 4개 기관으로부터 먼저 업무보고를 듣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정부 측에

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각 부처가 마련하여 시행 중인 대책을 위원님들과 함께 되돌아보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황보고에 앞서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사정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및 재정경제부 그리고 노동부 소관의 업무현황보고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노사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위원장 김금수** 존경하는 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새로 구성된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의 주요내용과 2/4분기 이행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의 추진배경 및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출산업의 기술 집약화와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는 국민 모두가 가장 절실히 바라는 국정과제로서 현재의 실업 문제는 단순히 경기순환적 차원의 대책보다는 경제·사회 각 분야의 근원적 혁신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통한 고용창출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노사정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26일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노사정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한 총 55개 항목에 이르는 사회협약을 금년 2월 10일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에서 노동계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분은 앞으로 2년간 임금 안정에 협력하며 경영계는 투자의 단계적 확대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노력하고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함과 동시에 투명 경영을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경제규제의 완화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며 노사의 일자리 만들기 노력을 정책적으로 최대한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협약 내용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일자리만들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약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회협약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소기의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본 협약 이행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협약내용의 주요내용과 추진현황을 우리 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사정위원회상임위원 김원배** 상임위원입니다.

준비된 유인물로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 주요내용과 2/4분기 이행 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의 추진 경과 및 의의, 협약의 주요 내용, 2/4분기 이행 점검 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 26일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2004년도 노사정위원회 핵심의제로 채택하고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월 12일 상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상무위 산하에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 기초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2월 8일 사회협약(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본위원회에서 고용 안정과 임금 안정, 노사 관계 안정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한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을 최종 체결했습니다.

사회협약 체결의 의의를 말씀드리면,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사회 통합이 증진될 수 있으며 고용과 성장이 조화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노사 당사자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정책 수립·집행에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모든 경제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의 고용 확대에 대한 세제·고용보험상의 지원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의 수혜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업종진출지원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 도입 및 전문 인력 채용 시 장려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은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정신을 널리 확산하며, 노조는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임금 안정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사는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통해서 경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고,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공급을 원활히 하고 고용의 질 제고에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용 안정과 격차 완화를 통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 기업은 인위적인 고용 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무제 개선 등을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에 함께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계층 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하여 기업은 임금 등에 있어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정규직 채용 시 기존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노력하며, 노조는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 임금 안정에 협력하고 취약계층 등을 함께 배려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유형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물가를 3%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등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예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만들기 시책 강화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 인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노사는 기업 실정에 맞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중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과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정부는 청년층의 경력 형성과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여성 근로자의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는 2006년까지 산전·후 휴가 급여의 사회 분담 수준을 현재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및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에 솔선수범하고 노사는 편의시설을 제공, 장애인동료갓기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일자리 만들기 지원을 위한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서 투명 경영과 근로자 참여를 통한 노사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법과 원칙’ 및 ‘대화과 타협’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며 노사정은 산업 현장의 임·단협 과정에서 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화합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확산을 위해서 일자리 만들기를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일자리만들기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만들기 지역별 연대사업을 통하여 지역 차원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노사는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사회협약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사정은 필요한 경우에 추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상의 사회협약 이행에 필요한 신속한 입법과 예산상의 조치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정치권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4분기 이행점검 결과입니다.

이행점검 체계를 말씀드리면, 1차 일자리만들기위원회에서 이행점검 추진 계획이 확정되었는데 그것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매 분기 종료 후 10

일 이내 노사정의 분기별 이행 실적을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받은 내용을 가지고 노사정위에서 최종 이행점검반의 평가 후에 일자리만들기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협약 내용이 총 7개 분야 5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따라서 점검 기준을 설정했는데 협약의 기본 정신에 해당하는 6개 항목은 이행점검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5개 분야 49개 항목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분야별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분야입니다.

정부 부문의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향후 5년간 200만 개 일자리 만들기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분기별 자체 점검을 통하여 이행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추정 편성 등 재정 지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신속하게 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규제 완화는 범정부적 추진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규제개혁위원회, 총리실 기업애로해소센터와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각종 지원 대책 등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안 통과에 노력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부문의 빈 일자리 채우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인력 확보 지원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노사 공동 부문의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계는 기업가 정신의 고양을 위해 노사 협력 우수 기업에 대한 시상과 홍보, 중등교사에 대한 시장경제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고, 노동계는 '인적자원개발에서 노동조합 참여방안'의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산업 수요에 부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노총 중앙교육원을 활용하는 등 노동계가 직업 능력 개발 참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 안정과 격차 완화를 통한 성장 기반의 확충입니다.

정부 부문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기업의 고용 안정사업 수행 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실질소득 보장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물가 목표치 3%대 유지를 위해서 물가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경영계 부문의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퇴직근로자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종합취업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주 40시간제 정착을 위해서 기업 인사노무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의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근로자들의 능력 개발 등 지원으로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 근로 조건 등의 격차 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인위적인 고용조정 자제, 교대근무제 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노동계 부문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퇴직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경영계와 공동으로 '종합취업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비정규직 등에 대해 노동조합 조직의 문호를 개방하여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근로시간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의 임금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만들기 시책 강화 분야입니다.

정부 부문의 성과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과 공공 서비스 지원 인력 확대, 공공부문 등에 일자리 확대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자, 청소년, 여성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취업 지원 기능을 확대 강화하였고,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각종 지원장려금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금 등의 실제 고용 창출 효과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노사 공동 부문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경영계는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대상 교육이나 경영자세미나 등을 통해서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홍보하여 왔고, 노동계는 기업 실정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 금년도 연구과제로 채택하고 산업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금융권 노사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자리 만들기 지원을 위한 노사 관계 안정 노력입니다.

정부 부문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6월 4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화와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대화와 타협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사 관계 취약 업종에 대한 노사 관계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단협 교섭과정에 고용 안정과 임금 안정, 노사 화합의 정신 구현을 위한 노사정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사 분쟁의 예방과 효율적인 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동위원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노사 공동 부문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경영계는 투명 경영 등으로 노사 협력 우수사업장 시상을 추진하고 있고, 노동계는 한국노총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노사화합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생의 노사 화합 선언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고용 안정과 임금 안정, 노사 화합의 정신 구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으며, 사업장 단위에서 정보 공유와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 방안, 노사 갈등의 자율적·평화적 해결 관행 확립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협약의 충실한 이행 및 확산입니다.

정부 부문의 성과는 지역노사정협의회를 통한 사회협약 체결이 확산되는 등 지역별 연대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지역별 노사 안정과 일자리 만들기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의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

양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지원·협력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노사 공동 부문의 성과는, 협약 관련 단체협약 지침 발간·배포,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지역별 노사 간 사회협약 체결 지원 등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만 산업 현장 단위에서 꾸준히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평가입니다.

노사정 모두가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의 정신을 존중해서 산업 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부처별로 사회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다만 아직 초기단계로서 가시적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촉진하고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부 대책을 구체적 일자리 창출 목표와 연계 추진토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홍보해서 기업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노사정은 사회협약의 취지를 살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제도를 확립하고 노사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특히 상대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이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노사정이 긴밀히 협력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인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중요한 국정과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근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내수 경기가 위축되는 등 경제 여건이 어렵고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는 수년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7.3%에 달해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사 관계의 안정과 기업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 간 타협을 유도하고 규제 개혁 등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나아가 경제 성장 등 경제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단기대책으로 중소기업 빈자리 채우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실업자 감소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간 두 차례 일자리만들기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사회협약의 이행 상황과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대책의 많은 부분이 금년 3/4분기 이후에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을 적극 개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말부터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와 청년 실업 증가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올해 2월 10일 노사정 간에 일자리만들기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월 26일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일자리만들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만들기위원회는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정부위원 및 노사정위원장 11명, 그리고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의 이행 상황 점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지속적 개발 및

보완 방안 검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추진 등입니다.

일자리 만들기 추진 체계 및 회의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체계는 국무조정실은 일자리만들기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일자리만들기위원회 결정 사항 추진 상황을 점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일자리 만들기 관련 소관 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경부·노동부에서 경제·산업부문과 고용·복지부문으로 나누어 추진 상황을 관리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종합 점검하여 노사정위원회 및 일자리만들기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 조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사회협약 이행 점검 추진 방안 등 6건을 논의하였고, 7월 27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 추진 상황,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 이행 상황 점검 결과 등 6건의 안건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실무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실업극복국민재단 관계자를 실무위원으로 4월 19일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협약 등의 이행 확보를 위한 점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재직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제도 도입 등 복지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빈자리 채우기 대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고용 환경 개선을 통한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설하고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Clean 3D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4년 7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전략적 정책과 사업을 적극 개발·추진해서 특히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전략과제 중심으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및 6월 시행령 제정으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일자리만들기 위원회와 청년실업대책특위 간에 약간의 기능상의 중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위원회 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년실업대책특위 구성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별도로 구성하되 그 운영은 일자리만들기 위원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점검 및 평가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재정부,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서 소관 일자리창출 사업을 수시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장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차관 김광림** 재정경제부차관입니다.

장관께서 지금 다른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므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의 주제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고 경제를 운용해 왔습니다.

노사 간에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서 노사정 간에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 또한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회에서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 정부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오히려 인력이 부족했습

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자리 부족 문제는 단기대책 중심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구조적 접근을 해 내지 못 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이 시기상으로 이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선진국들이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화된 이후에 대책 마련에 급급했던 경험을 되살려보면 우리에게도 아직 충분한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력한 일회성 대책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20개의 대책, 100개 넘는 법률의 제·개정안을 만들어서 일부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박병원 차관보가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준비된 유인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정책 운용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고용 동향, 일자리 창출 대책의 추진 경과 그리고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그리고 주요 정책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 과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 전체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경기 활성화 대책 전체가 바로 일자리 창출로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고용 동향입니다.

작년에 급격하게 위축된 고용 사정은 올해 들어서 수출 호조로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내수 위축에 따라서 서비스업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은 3.1%를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오히려 3만 개가 감소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8월까지의 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에 힘입어서 평균 41만 명 증가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농림어업에서 고용상실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2002년, 2003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광공업에서 금년도 9만 명이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 크게 힘입은 바 있고 또 서비

스산업에서 고용창출이 순조롭게 되고 있어서 전 산업을 평균으로 보면 금년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 4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만 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한 60만 개 정도가 창출돼야 정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고용창출 가지고는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느낌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구직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됨에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해서 실업률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금년 1~8월간에 전년 동기 대비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46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은 41만 명이 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업자가 5만 명 증가해서 실업률이 0.1% 포인트 상승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상황을 월별로 조금 자세히 보면 내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들어서는 고용의 개선 추세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표 맨 밑줄을 보시면 금년 2월부터 6월까지의 전년 동월 대비 고용 증가가 2월 51만 명, 4월 52만 명, 6월 44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7~8월에 들어서는 전년 같은 달 대비 고용증가가 29만, 26만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시면, 농림어업에서 고용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 광공업—주로 제조업이 되겠습니다—제조업에서는 작년에는 제작년 대비 고용이 7만 명 줄어든 데 비해서 금년 들어서는 10만 명 이상 전년 대비 고용이 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고용 사정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 또 서비스산업 중에서 도소매업의 고용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바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사업서비스업도 제조업을 지원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같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개인, 기타 서비스업에서 전체적인 고용창출의 상당 부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서민·중산층이 느끼는 어려움이 매우 큰 것은 일부 업종에서만 고용이 개선되고 있고 서민층의 고용이 많은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건설업에서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취업자 증가에는 일시 휴직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불완전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이러한 어려움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대책 추진 경과 중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네모는 노사정위원회와 국무조정실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경제 정책의 중점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19일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나누기, 빈 일자리 채우기 등을 통해서 경제 전반의 일자리를 늘리고 또 이러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일자리 제공과 취업지원 기능을 통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또 재정지출 확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완화, 건설경기 연착륙, 중소기업 종합대책 등 주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은 그간 정부가 마련한 주요 경제 정책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정책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책들은 법규 개정 등 후속조치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시행 중인 대책도 경제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며 또 대책발표 이후에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하여 소비·투자 심리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경기의 후행성을 떠는 고용 사정은 앞으로 내수의 회복 시기와 강도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확대되어야만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의 고용증가가 가능하고 또 소비가 회복되어야만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산업에서의 본격적인 고용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내수를 조속히 안정·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재정·금융 정책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서 투자·소비 심리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고용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서 내수 회복이 조속히 고용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정책 과제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는 거시경제 정책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재정·금융 정책을 통해서 경기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소비 등 경제 심리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효과가 큰 내수가 회복되어야만 고용 증가, 내수 확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소비는 10억 원 당 24명인 반면에 투자와 수출은 16명 수준입니다.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부족한 내수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추정 1조 8000억 원을 포함한 4조 5000억 원 규모의 하반기 공공지출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도 올해보다 11조 4000억 원 확대한 131조 5000억 원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금융 정책과 감세 정책도 재정지출 확대 정책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콜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가계와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세율을 인하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에어컨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소비 회복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 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 활성화 문제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고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야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의 설비투자 확대 조짐이 조기에 본격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핵심·덩어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다기한 토지이용 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또 부처별로 토지이용 규제 정비 계획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향후 2년간 기존의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정비할 계획입니다.

투자 심리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금융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중자금이 생산자금화 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연기금의 자산운용 방식을 주식 등으로 다양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노사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노사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대처하고 있으며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정위원회 등 노사정 간 대화채널의 조속한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 경기 연락처입니다.

건설업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특히 일용 근로자가 많아서 건설업 고용이 위축되면 서민층의 어려움이 큼니다. 그 밑에 전 산업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고용의 비중을 보면 전체 취업자에서는 8.2%입니다. 일용 근로자만을 보면 35%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는 대로 건설 수주가 1/4분기, 2/4분기에 14.2%, 27.7% 감소했습니다. 다행히 7월에는 감소 폭이 3.3%로 줄어들었습니다. 건설 경기의 선행지표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4/4분기 이후의 건설 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부문의 투자재원 확충, 민자유치 활성화 등을 통해서 SOC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 편성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공기업 ABS 발행 등을 통해서 공공 부문의 SOC 투자 재원을 확충하고 학교시설 등 민자사업의 대상을 다각화하여 민자 유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부동산 안정대책의 기초는 그대로 유지하면

서 주택 수요와 공급의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모기지론의 활성화, 서민층의 전세·구입 자금에 대한 보증 확대, 임대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주택 수요를 회복시키고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강북 재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 등을 통해서 주택건설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새로운 유형의 추가적인 건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판교·과주·아산 등 신도시 개발과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복합산업단지를 조속히 착공하는 한편,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서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혁신도시의 조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서비스업은 과거 추이나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고용과 성장 측면에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밑에 숫자를 보시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이고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입니다. 미국과 비교해 보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 정도 격차가 있고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은 앞으로 고용과 성장에 있어서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고용 창출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제조업과의 병행 발전, 국제수지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2년 이후 2003년 사이 취업자의 증감을 보면 농림어업에서 72만 명, 제조업에서 78만 명이 줄어든 반면에 서비스산업에서만 454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최근 2~3년간 계속해서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제조업에 비해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금융·인프라를 개선해 왔으며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업종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금년 들어서만 해도 현재까지 17개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DDA, FTA 등에 대비한 서비스산업의 대외

개방 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의료·교육기관의 유치, 교육특구 등 지역특구, 복합레저단지의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구조조정이 지속됨에 따라서 앞으로도 대기업에서는 외환위기 이전과 같은 고용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고용 창출의 원동력 역할을 해 온 중소기업도 내수 부진과 경쟁력 약화 등 경기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겹쳐서 고용 흡수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직전부터 2002년까지를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에서만 고용이 212만 명이 창출되었고 대기업에서는 고용이 125만 명이 줄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5500억 원을 반영해서 신보·기보의 보증 여력을 확대하고 구매기업의 발주 시점에 은행이 대금을 납품기업에 지원해 하는 네트워크론(Network Loan)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유형별,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과 투자 위험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현행의 보증·대출 이외에 투자방식의 자금 지원을 병행하고 중소기업의 융자방식이 현행 담보·보증 대출 위주에서 신용·기술평가 대출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협력사업의 발굴, 불공정행위 시정 등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재정 지원의 강화입니다.

세제·재정 지원을 통해서 임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채용 수요를 앞당겨 실현시키고 신규 채용 수요를 유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원이 없더라도 고용할 인원에 대해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추가고용 또는 고용 유지 시 일정 금액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

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금년 1월로 소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 청소년 유해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에서 추가고용을 할 때 1인당 100만 원씩을 세액에서 공제하고 생산량 감축 등으로 종업원을 감축해야 하지만 교대제 개편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고용창출형 창업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도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에 대해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고용안정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연간 7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중소기업이 고용환경개선 설비 등을 설치하고 고용을 늘리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培**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장관입니다.

오늘 국회 제2차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80년대 이후 일자리 창출 문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 있어서 노사정 모두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고용 흡수력이 저하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3%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는 3만 명이 감소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연초부터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노사 간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국회에서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부에서는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장잠재력 확충 이외에 고용·복지 정책을 통한 추가적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 고용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빈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일자리에 청년, 여성,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노사관계 안정 등 고용친화적인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서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노사 등 경제 주체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월 10일 체결된 노사정사회협약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사 모두가 일자리창출에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민기 고용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仁培** 노동부 업무현황 보고가 좀 많으니까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노민기입니다.

고용과 복지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용 동향, 추진대책 개요 그리고 주요 과제별 추진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마는 고용 동향은 재경부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첩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재경부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지속된다면 5% 성장을 지속하더라도 앞으로 5년간 150만 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숫자로는 최근의 고용불안 완화와 잠재노동력 활용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고용·복지 정책을 통한 추가적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증가 없는 성장이나 경제 선진화 없는 고용창출을 지양하고 소득과 고용을 동시에 창출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발전 전략(road A)을 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장잠재력 실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출된 일자리가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협력적 노사 관계를 구축해서 노동시장을 안정화하는 세 가지 과제가 되겠습니다.

주요 과제별로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나누기 추진입니다.

추진 현황은 법정시한보다도 앞서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약 5억 원 정도의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대제 개선과 경영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뉴패러다임 모델을 개발하고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이를 위해서 한국노동연구원에 뉴패러다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대제 개선 등 뉴패러다임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수교대제 전환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뉴패러다임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무료 컨설팅 시범사업을 내년도 중에는 보다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주부 등 자발적 단시간근로 활성화를 위해서 단시간근로자 적합직종·근로형태 등 적정한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아울러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나 남용을 규제하는 제도 개선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층의 실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지속되고 있고 그 이유는 대기업과의 근무조건 격차, 고학력화에 따른 기대수준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표를 보시면 작년도에 실업률은 3.4%, 실업자는 82만 5000명이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률은 6.2%, 부족 인원은 13만 9000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서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CLEAN사업 그리고 중기청을 중심으로 한 직무기피요인해소장비 개발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및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 국민주택 특별분양 등의 생활향상 지원 시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체험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보육시설의 확대, 적합직종에 대한 훈련 실시 등 여성과 고령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위한 여건 조성 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지원과 구조개선자금 융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격차개선사업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술사나 대기업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서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제도도 10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유망업종 등 신규업종에 진출하고 고용을 늘리는 경우 지원금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알선서비스를 강화해서 기업 전담 상담창구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나 중소기업에서 워크네트에 동영상으로 자기 또는 기업의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TV 드라마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비영리단체 등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분야는 공공·공익 분야에서 필요한 직무를 발굴해서 취약계층 등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의 비중을 보면 한국은 2.0%에 불과하고 미국이나 영국, 스웨덴 등은

10% 또는 18.4%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를 늘리면서 한편으로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산재근로자 간병 및 자활지원 사업, 외국인 근로자 노동상담 사업,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 등입니다. 금년 8월 현재 888개 단체에서 3420명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부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육 분야의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복지부를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집수리·간병 등 자활근로 일자리를 늘려가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적합한 일자리도 발굴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인력 채용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를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등 지속적인 일자리로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간병 전문인력 양성 등 간병 서비스의 활성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 문제입니다.

고용안정센터를 주축으로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연결하는 일자리 매개 기능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마는 인력 부족, 수요자 특성별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는 크게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산업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고용안정 서비스를 선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획일적으로 운영해 오던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를 규모경제를 위해서 종합센터 일반센터 등으로 개편하여 기능의 차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Work-net, 직업훈련전산망, 고용보험전산망을 연계하는 등 정보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여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상담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된 직업훈련 서비스를 근로자 생애에 걸쳐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직 단계에서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와 직장으로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있고, 재직 단계에서 e러닝 등 재직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을 활성화하고 있고, 퇴직·실업 단계에서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를 위한 훈련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관은 학과 특성에 따라서 수업 연한을 조정한다든지 또 수시입학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훈련기관의 질적 제고를 위해 평가·지도 점검체제도 개선하고 있고, 훈련교사에 대한 재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산업기술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제도도 종목을 통폐합하거나 신설하는 등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고용안정 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을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9월 14일 관계부처와 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서비스선진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밑에 노동부차관을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선진화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재 세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 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교육훈련 내실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 등이 참여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학교기업의 설치, 산학 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노동시장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중장기적 노동시장 전망을 할 수 있는 인력수급 전망

시스템의 구축도 서두르고 있고, 학생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직장 탐색 및 직업 체험이 가능하도록 대규모의 직업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대한 노사정 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결정 연기 등으로 노사정 대화의 틀 복원 문제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노사 문제가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 해결되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분규 해결에 급급한 인위적 규제나 무원칙 대응을 가급적 지양해 왔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의법 조치해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 관행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투명경영 실천 매뉴얼'을 개발하여 책자화해서 배포했고,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별 사업장의 노사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도 20억 재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 단위 노사정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입법 등 주요 정부 입법과 관련해서는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노사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노정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사 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 등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林仁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나오신 오제세 위원님, 인사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열린우리당의 청주 흥덕갑 오제세입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仁培**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씩 드리는 방식으

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구 위원** 제가 질의를 한다기보다 격려 내지 인식을 같이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김대환 노동부장관님, 한덕수 국무조정실장님, 김금수 노사정위원장님, 김광림 재정부차관님, 여러 정책 책임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약 2년간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과거에 별로 경험하지 못했던 구조적 실업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을 일면 정의한다면 아주 단기적인 고용 창출 프로그램을 포함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고용 능력을 어떻게 배양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사회안전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중장기 대책들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 문제를 접하는 대응 자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재정경제부차관보, 삼성경제연구소나 국내 경제연구소도 그렇고 ADB에서도 지금 한 3% 중반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금년도 약 4.4%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 우리 잠재 성장력을 5~5.5%로 본다면 내년도에 신규 실업이 얼마나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지금 현재 성장률 1%당 고용 창출 능력이 한 6만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장률이 한 2%포인트 떨어진다면 실업은 한 12만 정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실업률이 한 0.5% 정도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5%, 3.6%대에 있는 실업률이 4%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문연구기관들의 전망은 이대로 악화된다면 하는 그런 전망이고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

문에 국회에서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입법들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정부는 바로 집행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정책들이 집행되어서 효과를 발생한다면 금년도에는 5% 성장 유지가 가능하고, 저희들로서는 내년도에도 5%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이기 때문에 3%, 4%로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덕구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위스트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도 예산인데, 우리가 재정 규모를 당정 간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3.6%, 3.3% 중반대의 성장력 가지고 내년 경제를 운용하지 않도록 예산이 충분히 팽창적 재정 정책으로 전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내년도 예산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정도 늘어난 예산이면 일단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간기업의 설비 투자가 뚜렷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 가면서, 민간 소비는 아직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민간 소비도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해서, 지금은 우리 경제가 수출로 지탱되고 있고 또 재정 지출로 당분간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그 기간 중에 설비 투자와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저희들로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구 위원 중요한 것은 내년도 신규 예산에 고용 확대를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느냐,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했지요? 추가경정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런 신규 프로그램, 단기 대응적 프로그램에 고용 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정덕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에서 논의할 때 보면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나중에 국방비로 떼어 가고, 어디로 떼어 가고 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 이쪽에 집중력을 갖고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자꾸만 줄어들기 때문에 막판에 가서는 결국 거기서 잘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장관님들의 특

별한 노력을 저희들이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것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경기에서 가장 위험 관리 대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하고 건설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현재 아주 극심한 실물경색 상태에 있는데 이 실물경색이 금융경색으로 가면 그것은 위험성이 높아지고, 신용 위험이 결국 연쇄부도로 가면 아무리 새로운 고용 창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자 중소기업 연쇄 부도에서 배출하는 엄청난 실업을 감당해 낼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우리 정책의 포인트는 중장기적인 고용 능력의 배양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을 어떻게 미리 예방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외환위기 당시 초기의 건설경기에 비해서 작년이 약 반, 금년에 와서 또 그것의 반, 이렇게 해서 지금 건설경기가 극심하게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건설경기가 고용의 흡수력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인데, 물론 고용을 위해서 건설경기를 부양책으로 쓰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는 올바른 정책이고 길게 봐서 타당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만약 건설경기가 굉장히 경착륙의 속도로 갔을 경우에 거기에서 포용하고 있던 방대한 고용 인구를 어떻게 사회로 배출해 낼 것이냐,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건설경기와 관련된 정부의 예방적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부도 건설경기 연착륙하고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을 막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고용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덕구 위원 지금 금융기관과 정부 사이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고 금융 자율화나 기타, 현실적으로 보면 신용보증기금이든지 생존 보장형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병폐라든지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만일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이 폭발을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부 내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이런 고용의 신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표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培** 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먼저 재경부장관님이 오늘 왜 못 나오셨습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지금 참석하고 계시고요, 차관님은 국회 안에서 열리는 다른 회의에 지금 가셨습니다. 원래 그 회의도 10시부터 열리는데 이쪽 회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박순자 위원** 지금 재경부에서 나오신…… 그러면 최종 정책 결정을 누가 합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물론 부총리께서 하십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국회에서 일자리창출특위가 있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장관과 차관이 안 계시면 어떻게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제가 전달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지요. 이런 안일한 재경부의 자세부터가 지금 한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는 원인과도 결국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올 초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경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신 것이 몇 자리나 됩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2월 17일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서는 5년간 200만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당 6만 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5% 성장을 하면 해마다 한 30만 개 정도가 창출되어서 5년간 150만 개는 순조롭게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노동부에서 보고드린 대로 추가적인 사회복지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라든가 일자리 나누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50만 개 정도를 예년보다 추가적으로 더 창출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현재 얼마나 일자리 창출이 되셨는지요?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2004년 8월 현재까지 한 41만 개 정도,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자료 1쪽을 보시면 2003년에, 1년에 한 4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됩시다마는 2003년에 고용 창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2년간 1년분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선 방금 그렇게 증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표에 보듯이 3월에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53만 4000명의 고용 증가가 있었다면 현재 8월에 보면 지난 3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만 6000명으로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예.

○**박순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더 창출되었다고 보겠습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그것은 연평균으로 따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월 평균으로 보면 전년 대비 41만 개의 고용이 창출되었다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박순자 위원** 신규인력 1명을 고용할 때 고용 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로 해서 100만 원씩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경부에서 볼 때 지금 얼마만큼 실효성을 보고 있고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요?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그것은 일자리를 1명 채용하는 순간에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1년간 고용을 유지한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액감면을 해 준 실적은 없으므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아직도 판단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제도를 발표하고 나서부터 기업에 들어가는 고용의 창출을 볼 때 이 정책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이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년 정도는 지나야 신청이 들어오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현재 신입 생산직 급여가 약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전 산업 평균으로 한 일백팔구십만 원 됩니다마는 생산직 근로자들 봉급은 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박순자 위원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되겠지요?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예.

○박순자 위원 세액을 100만 원 깎아준다는 그 제도로 인해 가지고 채용할 기업이 얼마나 되겠다고 아직도 1년을 더 기다려봐야 되고, 더 있어야 정책 판단이 난다고 보시는지요?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정부 정책이라는 게 항상 마지날(marginal)한 수준에서, 저희들은 이것 때문에 고용 안 할 사람이 고용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선상에서 분명히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었더라면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이런 도움이 있으면 고용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난 5월로 기억합니다. 모 호텔에서 글로벌 투자 컨퍼런스에서 재경부장 관해서 “금융시장이 최근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라든가 중국의 긴축기조, 고유가 등 이런 해외 악재의 충격을 받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곧 안정될 것이다. 고비를 넘기면 된다” 이렇게 아주 편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재경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중국의 경제안정 노력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그만큼 순조롭고 금리 인상이나 긴축 노력을 해야 될 정도로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저희들한테 큰 충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유가 문제는 잘 아시는 대로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총리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당시 상황 판단이 원유 수급의 문제가 아니고 일시적인 중동지역의 불안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의 내정사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원유 수급상황 자체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중국 역시 혁명주의의 장쩌민 주석이 가고 이제는 철저한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후진타오 시대가 도래했어요. 현재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현장에도 산자위에서 나가 봤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긴축이 유지될 것이라고는 절대 내다보지 않고, 지금 심각성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재정을 판단하시는 자리에 있는 장관께서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지, 아직도 답변하시는 우리……

그다음에 한 3, 4일 전에 충북 청주시 육거리 재래시장을 저희 당의 박근혜 대표와 나가봤습니다. 육거리시장에 나가니까 영세상인들 몇 백 명이 나와서 정말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지금 상황이 이 정도고, 최소한 국가산업단지에서 있는 전통제조산업인 염직이라든가 도금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체들은 한국에서 기업 안 하겠다고 산, 부도, 문 닫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이 일시적이고 안정이 되고 고비만 넘기자…… 고비를 언제까지 넘겨야 됩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중국 경기의 과열방지는 국제원자재 수급의 안정을 가져오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중국 긴축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조짐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원자재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재래시장 문제는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까 초반에 보고드린 대로 내수 위축으로 인해서 도·소매업이 고용도 줄고 굉장히 어려운 줄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재래시장에 대한 특별법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대책에서 그런 분야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재경부 특히 한국은행이 얼마나 우리 국제유가라든가 원자재 환율에 대한 국외변수를 경시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좀더 책임 있는 재경부의 정책을 촉구드리면서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 시간은 좀 빠주시고 제가 노동부장관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에서 청년실업자 등과 중소기업 인력수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채우겠다고 하시면서 8쪽에 인식 개선과 취업 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 체험기회를 부여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체험하고 난 뒤에 중소기업과 연계되어서 취직이 되었는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은 주로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취업지원이나 연수 지원 등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소기업 체험프로그램 참가자를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부처별로 연계성을 갖게 되기를 바라구요.

한 가지는 청년실업 문제에 있어서 사업주에게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결코 청년실업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3D 업체가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추산하기로는 약 14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무작정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언제부터 시행했던 제도입니까?

이제는 마인드 전환을 해서 예컨대 지금은 3D 업체에 근무하고 취업하더라도 자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재취업 기회를, 교육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러한 정책적인 대안을 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쪽을 보면 외국인근로자 상담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중소기업청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깊이 있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노동부에서 오늘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전국의 외국인 근로자들, 산업연수생이 됐든 불법체류자가 됐든 몇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박순자 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솔직한 고민의 흔적을 보이셔야 됩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 산업연수생에게는 어떻게 일자리를 하겠다, 또 불법체류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최소한의 보고는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필요하시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마는 그동안 외국인근로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산업연수생으로는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연수생을 이탈해서 현장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서 올해 8월 17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검해 온 바로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위해서 불법체류자를 일단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노동부 관련기관들이 과거 보다는 체계적으로 현재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단속함과 동시에 이들이 출국해서 다시 들어올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등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으로는 속도는 느리지만 제도는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앞으로 이 문제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책의 한 부분으로 보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培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단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 위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많이 질의하고 싶은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현재 8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실업률이 3.5%, 80만 정도로 나와 있는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률 3.5% 정도 같으면 일반적인 것입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는 3.5%의 실업률이 받아

들이고 느끼기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저는 실업통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 나라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통계에 준 실업자가 82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주일에 18시간 미만의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직을 아예 단념한 사람들, 직장을 포기한 사람들이 11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취업은 안 됐지만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약 30만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이 사람들이 다 실업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200만 가까이 되는데 바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3%대의 실업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대책을 세울 때, 굳이 답변하실 것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장관 김대환** 실업통계는 ILO 공통으로 다른 나라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이후에는 실업대책을 세울 때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지금까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문제가 충분히 고민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업률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선 국무조정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지면 사실 국가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것이고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서 일자리를 확충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들 비율로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취업노동자의 11%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13%이고 스웨덴은 약 18%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겨우 2.2%입니다.

물론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적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 내는 데 소홀히 해 왔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노동시간 단축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실 노동시간을 통제한다면 일자리는 확실하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좀더 조기에 실현시킬 의지와 사회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다른 부분도 질의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노동부장관님이 더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회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자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고 또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 부분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고민과 고려를 거쳐서 일단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그 일정을 단축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병호 위원** 저는 가능한 한 노동시간 단축도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김대환 장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노사 간의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강조하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경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입법안이 예고되면서 민주노총이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도 공식적으로 결정했고 또 11월에 총파업을 하겠다는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노사 사회적 협력관계를 추진해 왔지만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사정 사회적 협약의 가장 핵심은 노동자들에게는 고용을 보장하고 일정 부분 임금에 대한 양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제되면서 사회적 협약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협약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고용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지요.

98년도에는 정리해고제라든가 파견제라든가 이런 것이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이 가중됐고, 또 현재는 파견제가 나오면서 다시 또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속에서 과연 사회적 협약이 가능하고 사회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저는 대단히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사정위원장 김금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원래 구성될 때 민주노총이 노사정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깐 민주노총이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한시적인 기구지만 노사정위원회의 개편을 거기에서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파견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한 2년동안, 물론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외국 시찰도 하고 논의를 죽 한 것이지요. 거기에서 물론 합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지막에 나온 것은 일단 공익위원안이었습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특히 한국노총 쪽에서는 장기간 논의하는 가운데 노사 양쪽이 합의는 못 했다 하더라도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공익위원안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로서 불만인데 아마도 당정협이나 혹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노사정위원회에서 나온 논의들이 충분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합의는 안 됐지만 또 공익위원안이 노동부 안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런 논의 자체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병호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가지고요. 저는 논의되기 이전에 정부가 스스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재정부에 묻겠습니다.

자료 10쪽을 보면 '협력사업 발굴, 불공정거래 시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협력관계를 조성한다'라고 딱 한 줄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 대기업에는 자금도 여유가 있고 또 자금이 몰려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은 중소기업인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가지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크지 않고 중소기업의 효과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불공정 거래 관계들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 약화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압박을 받는다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진단이 나오고 이런 대책이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개발이나 인력의 교육훈련 이런 쪽에 공동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은행과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순간에 은행에서 중소기업에다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네트워크론제도를 만들어서 기업은행에서 8월부터 이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기업, 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결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핵심은 원·하청 간의 계약단가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하청기업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래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제관계를 원활하게 한다든지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있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알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노동부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쟁점인데 이게 아마 올 하반기에 노사관계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린우리당에 들어가서 항의를 하고 민주노총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정을 하고 한국노총이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부에서는 이것을 발의할 때 이것이 비정규직의 고용을 좀더 안정화시키고 차별을 해소시키는 입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노동부는 그렇게 설명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지요. 3년 동안의 파견노동제를 수용하고 전면적인 확대를 해서 또 임시로 3년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칫 잘못하면 항상적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요건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평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기업 측에서 조금만 제도적으로 하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비정규직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과 결들여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속률이 5년 6개월 내지 5년 7개월로 6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감소형태로 가더라도 한 10여 년이 지나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60% 내지 70% 이상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결국 이런 제도로 인해서 거의 전체가 다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전제할 수밖에 없고 고용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은 노동조건이라든지 노동자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의 실질적인 후퇴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 그 우려의 전제에 제가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려도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입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병호 위원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委員長 林仁培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단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열린우리당 소속 천안 출신 박상돈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때 경제 활성화가 일자리 마련의 전제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정부가 보고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고 핵심에 접근해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 한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활성화 관계입니다.

고용이 없는 성장이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IT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건설업이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산업 연관 효과도 굉장히 큰 업종이지요. 그런데 지난 7월 이후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고용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업중 위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작년도 10월 29일 조치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건설업 활성화하고는 차별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뜻에서 건설업의 연착륙을 시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평가를 하면서도 동시에 건설현장에 가 보면 토지규제가 지나칠 정도로 경직되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토지가 상승을 해도 즉각적으로 토지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토지를 안정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건설업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건설업을 냉각시키는 요인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재경부차관보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계획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더 강도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도시건설계획도 있습니다만 기업도시 건설 같은 것, 내년도에 한두 개 정도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네다섯 개 정도 검토할 수는 없는 것인지, 과감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동자금이 전체적으로 400조 정도 된다고 하고 기업들도 기업도시를 하겠다고 나서는 판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마련해 주

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간자본을 건설현장으로 투입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것이 결국은 고용을 증대시키는 길도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 경기 활성화에 지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는 부동산 가격 불안이 해소된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지정을 해제하는 계획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업도시를 한두 개가 아니라 네댓 개 추진할 수 없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업의 투자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투자가 일어나면 고용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말하자면 일자리와 배후도시를 같이 엮어서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보자는 구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수요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아이덴티파이 되어 있는 투자수요가 한두 개 정도라고 하는 말씀이고 저희들은 기업 쪽에서 좋은 프로젝트만 나오면 몇 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관련해서 제일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개발계획이 나올 때마다 그 지역의 지가가 먼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큰 개발사업들의 피지빌리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전에 이미 값이 다 올라 있으면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법안과 계획이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다음은 일자리 나누기 사업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묻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근무제 개선을 주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가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네요?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사실 기업하는 사람이 복

지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예.

○박상돈 위원 사실은 이 얘기가 그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주가 싫어하는 얘기일 것 아닙니까? 또 교대근무제 이런 것도 듣기 싫어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원한 실적을 보니까 금년도 3월에 이 시책을 도입했는데 8월 현재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은 4억 1900만 원, 그래서 혜택을 본 근로자는 415명입니다. 이것을 정부 시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 이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근로시간을 줄이는 이유가 반드시 일자리를 나누겠다라는 목표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가 있고, 그래서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와 그다음에 그것을 할 경우에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데요. 그것을 법으로 강제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같은 것이 서로 아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법정시한보다도 앞서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금년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이런데 지금 굉장히 가속도가 붙고 있고, 법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하겠다고 신고한 사업장이 중소기업의 경우에 1003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대근무제의 문제는 현재 3조 3교대로 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법 자체를 지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4조 2교대로 바꿔 가지고 쉬는 동안에 교육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생산성도 늘리고 고용도 늘리고, 그래서 기업의 수익도 올라가는 사례들이 유한킴벌리를 중심으로 해서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상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왕에 입안을 하셨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분석을 해 가면서 실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영진단을 통해서 경영 합리화를 돕는다든지 또는 고용여력을 확보하게 한다든가 판로 지원을 해서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사실은 고용여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들을 다각도로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培**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한덕수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각 부처의 여러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혹시 오늘 일자리특위에 나오시기 전에 서로 조정을 해 보거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특별히 이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 정부 부처가, 특히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검토하거나 논의를 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이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서 뭐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는 다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재웅 위원** 실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는데요, 굉장히 중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실제로 노동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한다든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다 끼워져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왜 만드십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오늘 여기 나오신다고 일부러 참고용으로 내놓으신 것입니까?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

는 것이 앞으로 이 위원회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충고도 받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도 잘 되고 다 잘 되어야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자체를 키우기 위한 정책이 개발되어야지 중소기업 환경 개선한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일하러 가겠습니까? 물론 조건의 요인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일자리 창출은 안 됩니다.

좀더 거시적으로 보고 큰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하도록 해야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각 부처마다 이런 식으로 아무 의미 없이 나열하면서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주워 모아서 보고서를 만들고 이런 아까운 시간을 내버리시려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여기에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중복되는 보고가 있는 것이지만 그 정책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웅 위원** 제가 정책이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왜 중복되는 보고서를 만들 정도로 쓸데없이 시간과 인력들을 낭비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정책이 필요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를 많이들 논의하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을 자꾸 정규직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비정규직화하는 노동자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리랜서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전문직도 더 다양해지고요. 그런 다양해진 전문직들이 오히려 정규직화하기보다는 비정규직화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산업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미래사회를 진단해 보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

은 지금 미국에서 사회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무조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는 정책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어차피 일자리는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 각 부처에서 조금 더 새로운 각도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혹은 고용을 증대시키는 부분으로 관점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경제부 차관보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고, 또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역시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심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학자들과 경제관련 연구소에서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박병원 차관보께서는 앞으로 특히 일자리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가 활성화되어 성장률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1년에 40만 개나 50만 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지요?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예.

○이재웅 위원 ‘삼성경제연구원이나 LG경제연구원 같은 데서는 그렇게 안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지요? 본인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재정경제부의 확고한 신념입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저희들로서는 오늘 설명드린 제반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5%를 만들어야 되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은 이룩하도록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 있는 정책들이 신속하게 실천에 옮겨진다면 5%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5%가 거의 확실하고 내년도에는, 사실 저희들이 연초부터 정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주신 것이 7월 이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정책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 정책들이 풀리(pulley)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5%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경제와 관련된 법들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만 통과

시켜 주면 성장할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마는……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그런 뜻도 있습니다마는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하여튼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서 빨리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지도 제가 확실히 보겠습니다. 오늘 차관보께서 분명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법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40만~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성장을 하면 30만 정도는 순조롭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를 40만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경제연구원 등 외부에서 보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비판은 어림도 없는 소리라는 말씀이시지요? 더구나 법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부에서 요구하는 법만 통과되면 외부에서의 비판적인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예, 그렇습니다.

법만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충실히 잘 집행을 해야 됩니다. 실천에 옮겨서 그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기 때문에 5%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데 실제로 경제관련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투자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경제성장을 결코 낙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보는데, 물론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그렇게 안 보기는 합디다마는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얘기하던데 저는 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인데 차관보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지금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4분기까지……

○이재웅 위원 저는 너무 전문적인 말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투자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회복조짐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02년에는 대기업 투자가 부진하고 중소기업 투자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중소기업 투자는 어렵고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 투자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가

면 확산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회복되면 그다음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는 식으로……

○**이재웅 위원** 성장률도 확보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그것의 효과는 내년쯤 되면 나타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예.

○**이재웅 위원** 확신하십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규제는 풀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저희 재정부에서는 그것을 풀려고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 단계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 굉장히 많은 적용제외와 예외를 두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내용에도 과거에 있었던 예외 중에서 익스라이어(expire)되었던 것을 다시 되살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적용제외와 예외만 가지고도 정부가 필요로 하는 투자는 다 적용제외와 예외에 해당되도록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혀서 투자를 못 하겠다 하면 추가로 예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과 그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과의 의견 차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시장개혁 로드 맵에도 3년 이내에 이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해서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는 현 단계에서는 적용제외와 예외로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폐지든 고치는 것이든 결국은 국가경제가 문제니까 그런 점에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경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培**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수 위원** 열린우리당 안산 상록 갑 출신 장경수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가 이 특위의 마지막 날이 아니지요? 3차, 4차도 있습니까?

○**委員長 林仁培** 예, 계속 있습니다.

○**장경수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 같은 분위기네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고 또 3차, 4차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3분만 쓰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활동하면서 질의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여야합의로 별도로 국회에 특위를 만든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줘 보자,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고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시적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단기적·중기적·장기적 로드 맵을 구분해 가지고 가시적 효과가 나서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차 회의를 할 때는 부처에서 저한테도 자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과연 재정경제부, 노동부, 노사정, 특히 재정부와 노동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아주 긴요한 현안사항이 무엇이고 국회 차원에서 도와줄 일이 무엇인가를 이런 특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여기는 국정감사 하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부 부처의 장들을 모셔다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따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차 회의 때는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培** 장경수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준 위원** 한나라당 마산 을 출신 안홍준입니다.

니다.

저도 가능하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의 노력으로 지난 2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이 맺어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사회협약을 기반으로 점진기준을 설정, 추진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수치로 계량화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각 분야별 달성도는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노사정위원장 김금수** 수치로 제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지요.

○**안홍준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시기도 어렵습니까?

○**노사정위원장 김금수** 우리는 사회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점검만 하는 것이니까 정부나 노사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하는 일인데 올라오는 것 자체가 수량화되어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자체로써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홍준 위원** 지난 2월 10일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기간 노사분규 발생현황은 차이가 있습니까?

○**노사정위원장 김금수** 작년보다는 조금 는 편이지요.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수로 보는 노사분규 건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반면에 교섭단위로 보는 분규 건수는 좀 줄었고 전체적으로 노사분규의 강도를 나타내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금년 이맘때까지 7% 정도 줄었습니다.

○**안홍준 위원** 그것이 효과라고 일정 부분 평가하고 있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조금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노사분쟁을 최소화시키고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노사관계 발전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기업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는지, 그리고 경제규제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와 관련해서 기업체의 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각각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각 기업이 노사 공동으로 그 기업이나 업종의 노사 발전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억의 재원으로 60여 개의 사업장에 하고 있고, 내년에는 40억으로 올리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성과 부분은 자료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일자리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고용인력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노사분규의 불씨로 남아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책이 속히 마련되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비정규직의 불만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질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비정규직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발적 비정규직 또는 정규직으로 가는 가교로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함정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반시장적인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일정 부분 규제에 들어가구요.

두 번째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근로조건 같은 데서 차별만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생산성 차이를 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차별이 만연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핵심을 차별 해소에 두고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안만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으로는 입법, 또 한편으로는 재정, 감독 행정, 경제정책 등 이와 같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해 나가면서 비정규직이 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굴러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은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회 일부분의 불협화음은 결국 불안감을 야기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논쟁거리로 남아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나 천도 수준의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지금 행정수도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기본적으로 행정부는 이전을 하고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천도라는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속칭의 천도라는 개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소위 법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 법의 준치 여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국회에서 지금 여야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현재 기업체의 해외 이전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당한 숫자가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최근에 중국을 방문해 보니까 길림성에만 약 1만여 개 기업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나가 있는지 아시는 분 없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저희 예측으로는 중국에서 약 100만 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매년 증가되는 추세라고 보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역시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이제는

생산을 어디서 하느냐, 판매를 어디에 대고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기업들은 장벽이 없어진 하나의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하기 가장 좋은 장소에서 또 시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기업들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여건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투자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중국에서 기업인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는 모든 인허가 같은 것이 원스톱으로 빠른 시간 내에 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해외 이전을 막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林仁培**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정종복 위원님, 김영덕 위원님, 오세세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남으셨는데 1인당 3분씩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 경주 출신 정종복 위원입니다.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부처 장관님이나 실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정부의 이런 노력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고 보안을 해 주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따지고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고 다같이 마음을 합심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곳으로 생각하시고 저희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도 구성되었고, 또 청년실업해소법이 제정되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보니까 기업인에게 청년고용 촉진장려금까지 주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직도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특별한 시원한 대책이 없는 것 같고 또 금방 해소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실업률을 보니까 올해 6월 3.5%였던 실업률이 그 사이에 3.2% 정도 감소되었다가 7, 8월에 다시 3.5%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 청년실업률을 보면 한 7.3%로 일반 전체실업률의 거의 두 배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고 저희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그것보다 더 높은 한 10%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 인터넷을 보면 가을에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채용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하려고 카페가 수십 개 개설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청년들에 대한 체감실업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전체적으로 5600억 정도를 투입해서 15만 명에게 일자리 연수·훈련 기회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말 현재로는 15만 명 정도가 이 시책의 수혜를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작년 동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작년 연간 청년실업대책이 10만으로 되어 있고 금년 7월 말에 15만, 금년 8월 말까지 16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아니,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10만 대비 16만이니까 한 60%…… 그런데 작년 통계는 연간 통계라서 1월에서 8월까지 통계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그러니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연간 16만에서 올해는 8개월 만에 16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종복 위원** 앞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다른 실업대책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청년실업대책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학

교교육의 문제, 기업체 채용 관행의 변화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정책과 경제정책 또는 교육정책, 직업훈련정책을 꾸준히 병행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만든다든지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본다든지 그와 같은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지금 구상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 김영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겠습니까마는 사실 일반 국민들이 일자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공장이 만들어져서 생산적인 것을 창출할 때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현대적인 개념은 다르겠습니까마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야말로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보면 중소기업도 빈 일자리 채우기로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고용 창출 부분과 관련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집계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영덕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도 안 가지고 있겠네요?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덕 위원**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 기업이 공장을 세우든지 그런 쪽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중소기업과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까마는 만약 이것이 역전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일자리 만드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가재정으로 일자리만 그냥 만들어 내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곳에 정책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에 보육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지금 농어촌에 사시는 분이 거의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농어촌 사람들이 볼 때는 와닿지 않습니다. 물론 농어촌에 노후대책으로 양로원 시설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농어촌에 대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좀 획기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培**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제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실장님과 재경부차관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개년에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5% 성장을 놓고 볼 때 플러스 해서 150만 개와 50만 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5% 성장이 안 돼서 4%나 3% 성장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는 6만 명씩 해서 1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모자라는 것이 12만 개의 일자리이고,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로 해서 매년 10만 개씩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으니까 3% 성장한다고 하면 1년에 2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5년간이면 1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3% 성장했을 때 5년간 110만 개, 1년에 2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목표다, 그리고 5% 성장이 된다면 30만 개의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5% 성장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10만 개의 일자리만 만들어 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5% 성장대책을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름 그대로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몇 개 만들어낼 것이냐, 그 일자리를 어디에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만 보고서를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임금을 100만 원씩 준다고 할 때 1200만 원이기 때문에 1조 2000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만 원씩 임금을 준다면 2조 4000억이 필요하기 때문

에 2조 4000억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기업이 50% 부담하고 정부가 50% 부담한다면 기업에서 1조 2000, 정부에서 1조 2000을 부담하면 10만 개의 일자리는 창출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10만 개의 일자리만 창출해내면 되지 5% 성장에 대한 대책, 중소기업 대책, 무슨 대책해서 경제문제 전반을 우리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한다면 그 20만 개를 어디에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하는 보고서를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培**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나머지 7개 정부부처로부터의 업무보고도 양당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이 심각해서 여야 대표 합의에 의해서 일자리창출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경부장관은 위원장에게 사전에 양해한 마디 없이 불참했습니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사전에 양해도 없이 회의장을 슬그머니 떠났습니다. 정부의 장관이 이런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면 어떻게 나라 경제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본 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각 부처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出席委員(13人)**

김영덕	단병호	박상돈	박순자
서재관	안홍준	오제세	이상열
이재웅	임인배	장경수	정덕구

정 중 복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하	중	범
전 문 위 원	박	용	관

○政府側參席者

노사정위원회			
위 원 장	김	금	수
상 임 위 원	김	원	배
국무조정실			
실 장	한	덕	수
노동여성심의관	손	정	웅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림
차 관 보	박	병	원
경제정책심의관	곽	창	신
노동부			
장 관	김	대	환
고용정책실장	노	민	기
노동정책심의관	신	영	철